

지역경제, 공유경제로 풀다

I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1 공유경제의 개요

□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도시화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 확대

-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 소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의미
 - 숙박 공유(Airbnb), 차량 공유(Uber) 등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업 중인 서비스 모델뿐만 아니라 공간, 음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에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 >

공유경제 구조도 (Collaborative Economy Honeycomb)		
Ver. 1 (6분야)	Ver. 2 (12분야)	Ver. 3 (16분야)
교통(Transportation), 서비스(Services), 음식(Food), 제품(Goods), 금융(Money), 공간(Space)	교통(Transportation), 서비스(Services), 음식(Food), 제품(Goods), 금융(Money), 공간(Space), 건강 및 복지(Health & Wellness), 물류(Logistics), 기업(Corporate), 유틸리티(Uilities), 도시행정(Municipal), 교육(Learning)	차량공유(Vehicle sharing), 운송 서비스(Mobility services), 서비스(Services), 음식(Food), 제품(Goods), 금융(Money), 공간(Space), 복지 및 미용(Wellness & Beauty), 물류(Logistics), 기업 및 조직(Corporate and Organization), 유틸리티(Uilities), 도시행정(Municipal), 교육(Learning), 노동자 지원(Worker support), 분석 및 평판(Analytics and Reputation), 의료(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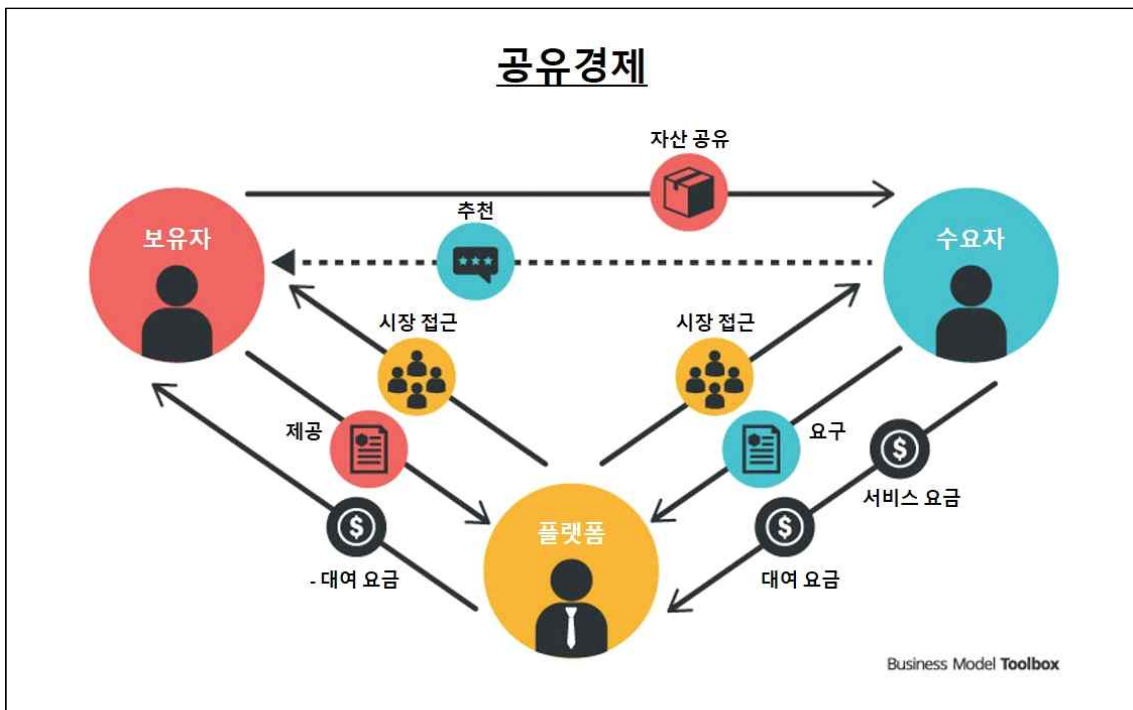
자료: <http://www.web-strategist.com/blog/>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 (2017) 재인용)

- 숙박, 차량, 금융,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25년경 3,350억 달러에 이를 전망 (PwC, 2015; World Economic Forum, 2015)

□ 공유경제는 소비하는 방식과 유희 자산의 사용이 ICT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경제로 정의 가능

-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은 ‘유희자산의 사용’, ‘ICT 플랫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공유경제를 정의
 - 보츠먼(Botsman)(2013)은 공간을 비롯해서 기능, 물건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저조한 자산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위하여 공유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공유경제로 정의
 - 공유경제는 소비, 생산, 금융 등 제반 경제활동 중 ‘소비’에 국한한 것으로 제품/서비스의 소유 대신 접속을 가능케 하여 무엇을 소비할지가 아닌 어떻게 소비할지를 재발명하고 있다고 강조
 - 이수일(2015)은 공유경제를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희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희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정의

<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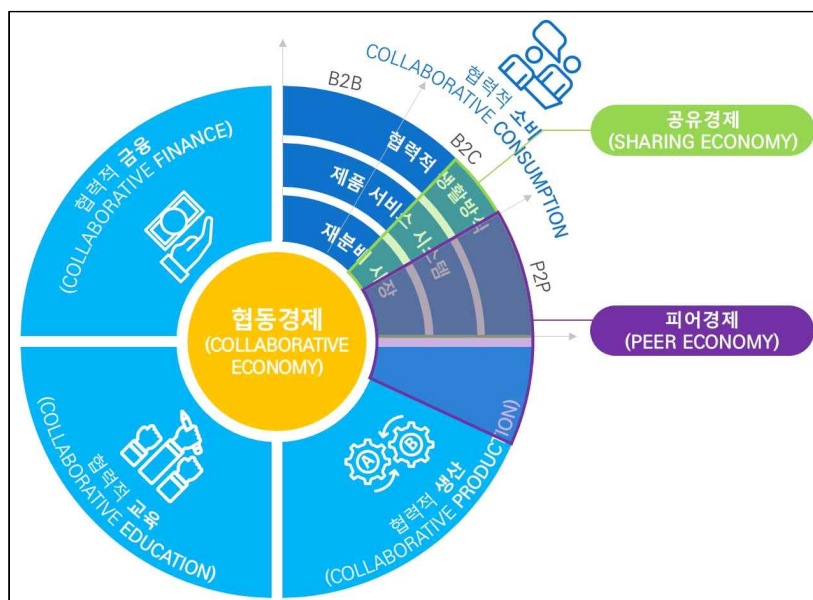


자료: <http://bmttoolbox.net/patterns/sharing-economy/>

□ 공유경제가 소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비즈니스 및 경제 전반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 존재

- 공유경제를 처음 제시한 레식(Lessig)(2008)은 대부분의 인터넷 비즈니스가 가격 기반의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혼합 형태임을 강조
 - 순다라라잔(Sundararajan)(2016)은 대중적으로 쓰이는 공유경제와 광의의 ‘군중 기반 자본주의(Crowd-based Capitalism)’를 혼용
 - ※ 군중 기반 자본주의는 시장거래를 기반으로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군중 기반 네트워크, 사적/전문적 서비스 간 모호한 경계, 일과 여유시간 간 모호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함
 - 군중 기반 자본주의는 보츠먼(2013)이 주장한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 협동경제는 중앙집중식 조직과 달리 연결된 개인 및 공동체들의 분산된 네트워크에 기반한 경제로 소비, 생산,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
 - 솔츠(Scholz)(2016)는 공유경제의 혜택이 CEO와 주요 투자자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혜택을 나누는 ‘플랫폼 기반의 협력주의(Platform Cooperativism)’** 제시
- 공유경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네트워크 기반 자본주의**’로 폭넓게 정의 가능

< 협동경제와 공유경제 >



자료: <https://www.fastcompany.com/3022028/the-sharing-economy-lacks-a-shared-de>

2 공유경제 모델의 확장 : 지역경제 활성화

□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 부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기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주로 협력적 소비와 관련 P2P 또는 B2C 거래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국한
 - 보츠먼의 정의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제반 경제활동 중 협력적 소비와 관련 주로 P2P 거래형태와 연관되나 렌탈 서비스와 같은 B2C 거래에서도 기회가 있음을 언급
 - 그동안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대표적인 성공 모델인 플랫폼 기반의 숙박(에어비앤비), 차량(우버) 공유 서비스 등에 한정되어 다른 분야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조망은 부족한 편
- 또한 공유경제가 경제 전반에 불러올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면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필요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자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
 - 같은 맥락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유경제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비롯하여 총론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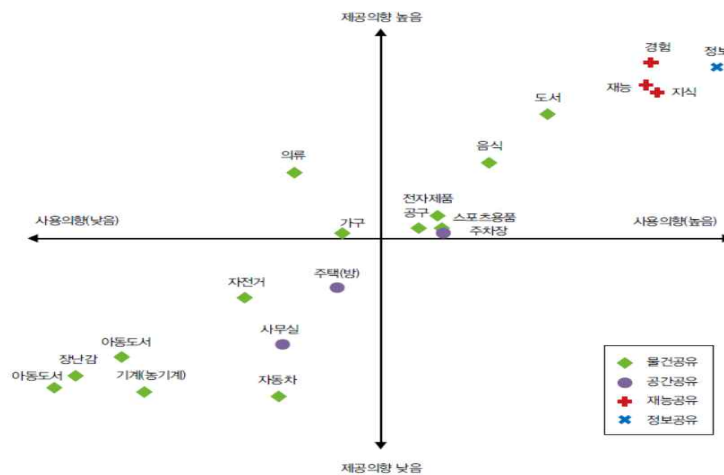
< 공유경제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유형 >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유경제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추진전략(2016)

< 지자체별 공유경제 정책 >

- ▶ (서울시) 민관 협력 모델로 민간기업과 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며, 공유도시 서울 선언(2012) 이후 공유 서울 2기 추진계획(2015)을 발표하는 등 도시문제와 생활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공유허브(sharehub.kr)운영중
- ▶ (부산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조례(2014)제정 이후, 공유경제 부산 추진계획(2015) 발표하여 공유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중개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을 극대화, 공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유문화 소통 확산 등의 과제 추진중
- ▶ (경기도)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와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상생협력 등 지역사회 문제의 공유를 통한 해결을 추진중이며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4)이후 경기도내 시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및 다양한 사업 추진중
- ▶ (광주시) 2013년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문화도시 광주 추진계획(2015)를 통해 공유기업 및 단체, 자치구와 마을단위로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인력양성, 지원조직 등 구축 계획을 밝힘
- ▶ (전라북도) 공유경제 제도마련, 공유경제 기반구축,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마련중으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7) 제정
 -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부문을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응답자가 많이 이용하고 싶은 분야는 지식·경험·시간부문과 교통, 공유기업 창업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서울시, 공유 서울 2기 추진계획(2015), 부산시, 공유경제 부산 추진계획(2015) 광주시, 공유문화도시 광주 추진계획(2015),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6) 전북연구원, 나눠 쓰는 공유경제 도민의식과 지역사회 대응방향(2016) 외 각 지자체홈페이지 참조

< 해외 지방정부와 공유경제 >

- ▷ 북미 중심의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도입현황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공유경제 세부 전략을 언급
- 지방정부에서 도입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공유경제 서비스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공유경제 서비스와 이를 도입한 지방정부를 정리

	역할	예시	위치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 ↓ 지방정부의 적은 노력 ↓ 역할 없음 </p>	역할 없음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 물물교환	여러 도시
	지방정부의 적은 노력	공동체 주도	촉진적 활동
	감독	에어비앤비(Airbnb)의 영향	여러 도시
	재고	공동체 공유 자산	포틀랜드, 플레그스태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패트릭 퍼레이드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마일 수송을 우버로 진행 ▶ 공동체 공유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SNS, 도시 간행물 	달라스
			포틀랜드, 플레그스태프, 헤네핀 카운티
	기금	공공 도서관	캐나다 밴쿠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팝업스토어 ▶ 공립도서관·지역문화센터에 공공 도서관 자리 확보 ▶ 'The Sharing Project'를 통한 연구 	뉴욕 여러 도시 밴쿠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친 인큐베이터 (공유주방서비스) ▶ 단기 숙박시설 임대 허가 시스템 및 법령 	토론토 포틀랜드, 오스틴
	소집	지방정부 직원들은 포틀랜드주립대, 소마 에코 지구, 지역연합에 모여 재사용 범위 측정	포틀랜드
	파트너/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Resourceful은 LocalWork, GoodWill과 파트너 ▶ Bayshare는 재난관리국(DEM)과 파트너 ▶ 교외 교통센터 정류장을 위한 Carsharing 파트너쉽 	플레그스태프 샌프란시스코
			여러 도시
	지방정부의 중간 수준 노력	대비 조치	도시 주도
	교육/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x-It Clinic 운영 방법 ▶ 똑똑하게 구매·재사용·임대·공유·수리·유지하기 등에 관한 블로그 및 페이스북 게시물 	헤네핀 카운티 포틀랜드, 플레그스태프
	지지	도시는 라이드소싱 규제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지	텍사스 휴스턴
	개발계획	(저개발) 통합 이동성 계획	미국내 도시들 - Shared Use Mobility Center 지침에 따름
	대규모 정책조정	단기 임대 허가 시스템 및 법령	포틀랜드, 오스틴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	시행 조치	도시 주도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쉐어링에 시정부 동참 ▶ 교통앱을 위한 도시데이터 공유 ▶ 새로운 제설앱 촉진 	여러 도시 뉴욕시; 포틀랜드 캐나다 몬트리올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리소스풀 PDX	포틀랜드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카쉐어링 단체 대상 전기충전소	밴쿠버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 </p>	소유	바이크쉐어	여러 도시
	규제	단기 임대 및 라이드 소싱	여러 도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임대 규제 ▶ 라이드소싱 규제 	뉴욕시 등 휴스턴 등

자료: One Earth,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roadmap(2015)

□ 공유경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 존재

- 공유경제는 소비자 후생의 증가, 경제적 기회의 민주화, 친환경적 소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기대
 -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의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소비자 후생 증대
 - 노동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의 경제 주체들이 유희 자본 활용을 통해 높은 자본이익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회의 민주화 가능**
 - ※ 피케티(Piketty)(2014)는 지난 200여년간의 불평등 현상과 관련, 자본 이익률(r)이 임금성장률(g)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음을 주장
 - 이 밖에 **지역 기반 자원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 공동체 의식 제고 등도 공유경제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됨
- 반면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직업 안정성 저해 등은 부정적 영향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숙박,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인 숙박업계나 택시업계와의 경쟁이 부각되며 사회적 갈등이 증대하고 있음
 -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의 등장으로 정규직 직원이 줄어들고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 등의 고용형태가 늘어나면서 임금, 작업 환경, 직업 안정성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
- 공유경제가 불러올 수 있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유경제 기반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공유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려는 노력 필요

- **공유경제는 지역 내 유휴 자본 활용, 로컬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
 - 특정 기업 유치, 인프라 중심의 공공사업 등에 의존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 측면에서 한계
 - 지역 내 유휴 물적/인적자본 등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은 일자리 창출, 환경문제 개선,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유경제는 유휴 자본 활용을 통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순다라라잔은 공유경제로 다양해진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지 않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
 - 또한 역내 일자리 창출, 환경 문제 개선, 인접 자원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선행연구들은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관광 분야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버 서비스는 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Fang et al., 2016; Li et al., 2016)
 - 특히 특정 지역 기반의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 효과가 아닌 **로컬 네트워크 효과 발생**
 - 이에 글로벌 차원의 승자독식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정부 학계 등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新지역발전방안**’ 등의 정책방안 도출이 이뤄지고 있어,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의 필요성 존재

< 新지역발전 및 지방분권 >

-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감소, 청년층의 인구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과소화 현상 등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해 新지역발전방안(안) 제시

<h3>자생적 혁신역량강화</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연구활력 커뮤니티 앵커 구축 2)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3) 민간자율 공동체조직 활성화 4) 지역 인구정보 관리 지원 	<h3>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심지 계층별 시설의 재배치 2) 스마트 거점마을 조성 3)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 4) 지역간 연계·네트워크 기반 지원
<h3>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희망뿌리단 운영 2)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3) 비농어업인 이주정책 지원 4) 지역 교류·정착 허브 지원 	<h3>인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기업유치 지원 2) 지역 활력산업 지원 3) 지역순환 금융체계 구축 4)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활성화 지원
<h3>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활성화 2) 자치단체 간 시설·인력의 공동 활용 3) 일선 행정기관 기능 조정 4) 민관협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h3>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마련 2) 이동편의점을 활용한 종합생활서비스 제공 3)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 4)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5)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의료시스템 구축

자료: 행자부·지방자치실천포럼,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新지역발전방안” 세미나(2017)

-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이양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나타남



자료: 행정연구원,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방분권(2017)

II 주요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사례

1 미국

가 자원 교환 공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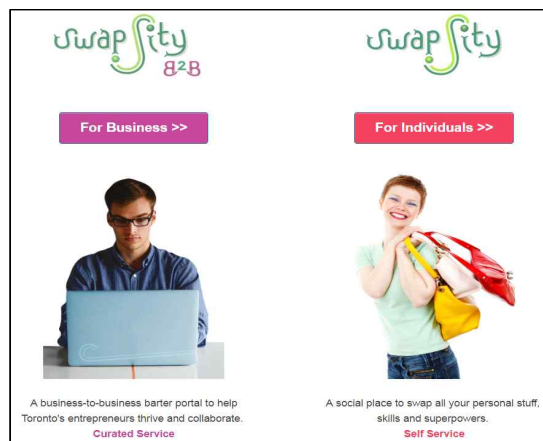
□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의 물물교환(Barter)을 지원하는 사이트 운영

- 2009년에 설립된 미국 뉴욕주의 Share Tompkins는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내 물물교환 거래 이벤트(Community Swap Meet)를 계획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기반의 Swapsity는 사용자가 교환 가능한 물건, 기술, 서비스 등을 사이트에 올리면 그것과 교환하기를 원하는 물물교환 대상 중 마음에 드는 것과 교환 가능
- 그러나 이와 같은 물물교환 지원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 간 매칭의 어려움, 단순 정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용 활성화에 제약

< Share Tompki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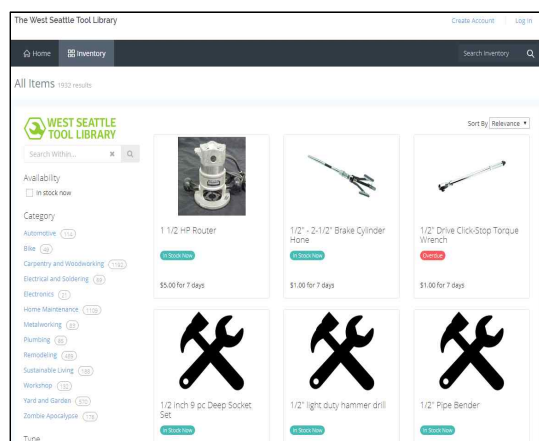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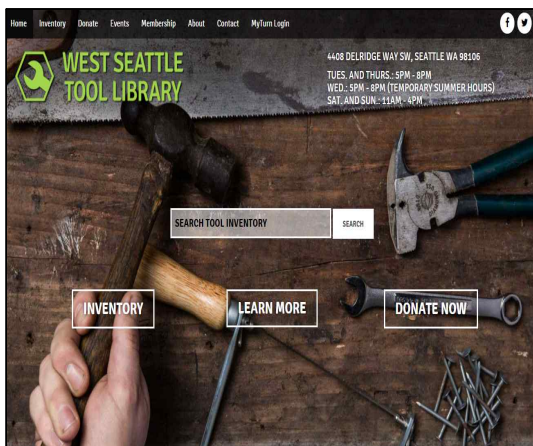
< Swapsity >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산을 대여하는 ‘공구 도서관 (Tool Library)’ 형태의 공유 플랫폼 운영

- 1970년대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Columbus) 시는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종 공구를 대여하는 공구 도서관을 설립
 - 콜럼버스시 공구 도서관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무료로 대여
 - 초기에는 시가 주도하였으나 이후 민간단체 주도로 관리 및 운영
- 콜럼버스시 공구 도서관과 같이 공구 현황을 카탈로그 방식으로 관리하던 1세대 공구 도서관에서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구 도서관 모델로 발전
 - 2009년에 설립된 워싱턴주의 West Seattle Tool Library는 집수리, 정원관리, 차량정비 등을 위한 공구들의 재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렌탈(rental)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들은 공구 도서관을 통해 대여 가능한 공구의 세부 명세, 대여료, 대여 기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필요시 전용 작업장도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음

< West Seattle Tool Library >



나 공동체 화폐(지역화폐)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화폐 (Community Currency) 관심 증대**
 - 공동체 화폐는 국가 주도의 법정 화폐를 보완하여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화폐(Local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 화폐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게 됨

-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 유입, 지역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상호 부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화폐 재조명**
 - 1980-90년대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화폐는 저소득층 보호, 자원봉사 활동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남미,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도 시행
 - 1980년대 도입된 공동체 화폐는 주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회원 상호 간 신용에 기반한 거래 지원
 - 80년대 초에 시작한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는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가 가능한 교환거래망으로 협력적 사회관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
 - 이어 도입된 타임 달러(Time Dollar)는 자신의 봉사활동을 시간적 가치로 환산하여 시간은행(Time Bank)에 예치하고 나중에 사용 가능케 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
 - 한편 1990년대 이후 도입된 공동체 화폐는 법정통화와의 전환을 허용하면서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발행됨

- 영국에 소재한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1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 지역 경제에 £1.76 만큼의 가치가 있지만 역외에서 소비되면 £0.36 가치만 발생(Wallis, 2005)
- 1991년 미국 뉴욕주 이타카시에 도입된 이타카아워(Ithaca Hour)는 지폐형태의 실물화폐로 발행되었으며 서비스 내용에 상관없이 1시간은 1이타카아워(10달러)에 상당하는 가치를 갖고 통용

□ **최근 공동체 화폐는 거래형태 확대, 사용처 다양화 등을 통해 발전중**

- 2012년 영국의 브리스틀시에 도입된 브리스틀 파운드(Bristol Pound)는 기업 간 거래, 세금 납부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결제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도 제고
- 이전 세대의 공동체 화폐들이 대부분 P2P, B2C 거래를 중심으로 통용되었던 반면 **B2B, G2B 형태의 거래도 지원**
 - 지역화폐를 법정 화폐로 전환시 할인율(3%)을 적용하여 역내 기업 간 공급사슬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지자체 공무원 보수 지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지역화폐 도입으로 이용의 편의성 제고에도 노력

< 공동체 화폐의 발전 양상 >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도입시기	198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1990-2000년대	2010년대
대표사례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Time Dollar	Ithaca Hour, BerkShares	Bristol Pound
도입지역	캐나다	미국	미국	영국
가치평가	회원 간 합의	시간	시간, 법정화폐	법정화폐
거래수단	계좌거래	계좌거래	실물화폐	실물/가상화폐
주요 거래형태	P2P	P2P	B2C	B2C/B2B, G2C/G2B
법정화폐 환전여부	불가	불가	가능	가능

2

독일

< 독일의 산업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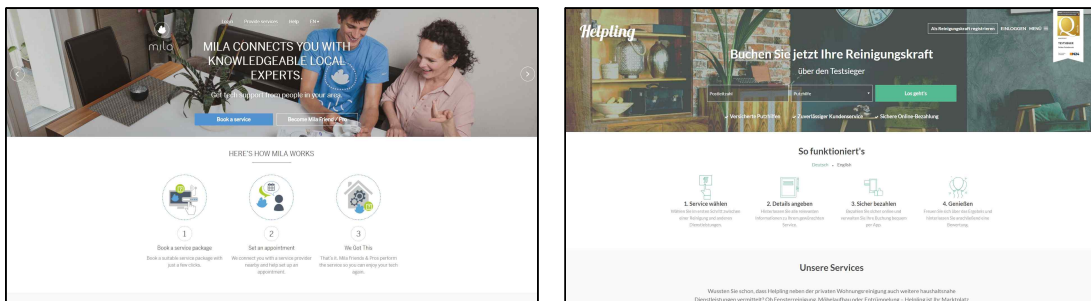
- ▷ 독일은 산업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인 독일은 1969년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연방차원의 산업정책 추진(“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 1970, 1980년대 경기침체와 1990년대 통일 이후 높은 실업률, 성장률 약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독일정부는 건강보험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
 - 이로 인해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유럽경제의 엔진으로 경제적 위상 제고
 - 독일의 산업정책은 국가 내 투자 환경을 강조하는 ‘독일 투자입지 (Standort Deutschland)’로 요약되며, 최근에는 ‘산업 4.0(Industrie 4.0)’, ‘노동 4.0(Arbeit 4.0)’을 기치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경향과 글로벌 경쟁의 압박에 대응해 독일 정부는 ‘좋은 산업정책(Guten Industriepolitik)’과 연방차원의 산업정책의 역할 강조(Aigner et al., 2017)
-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공유경제 확산에 대한 기술 요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위험과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
 - 산업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EU와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은 지역경제, 교육, 교통, 주거,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활용
 - 독일정부는 공유경제의 핵심내용인 기술변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지만,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화, 서비스 아웃소싱, 단기일자리 등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Schmidt, 2017)

가 플랫폼기반의 협력 -일자리 플랫폼-

□ 독일 내 공유경제는 일자리플랫폼을 활용한 가사 서비스까지 확대

- 'Helpling (독일)'과 'Mila (스위스)'의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증가에 대해 공유경제의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정책적 노력을 전개중
- 공유경제의 예로서 지역경제와 노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사 서비스 분야에서 저렴한 노동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음

< 'Mila'(왼쪽)와 'Helpling'(오른쪽) 홈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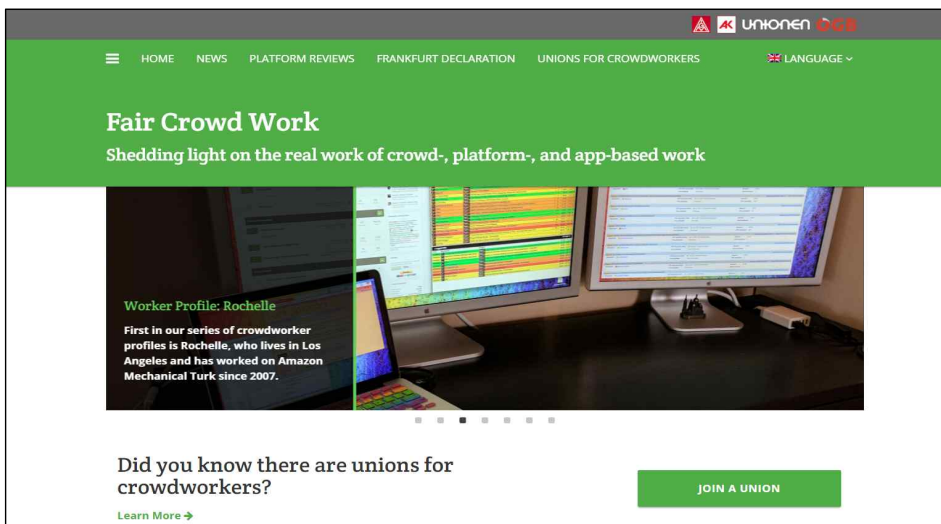
- Helpling은 베를린에서 창설된 소규모 회사로 독일에서 청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시간당 약 13유로로 집 청소 서비스를 제공
 - 현재 독일의 12개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300명의 근로자가 약 15만의 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
- Mila는 2013년에 스위스에서 설립이 되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스위스 취리히, 독일 베를린,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에서 서비스를 제공
 - Mila는 스위스에서 통신회사 Swisscom과 협력하고 독일 내에서 Vodafone사와 협력하여 집에 생긴 기술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Mrass and Peters, 2018)

□ 공유경제로 노동의 적응문제,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의 붕괴와 협력 방안이 유럽 내 중요한 문제로 부상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기술 변화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열악한 노동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의 붕괴 위험이 상존(BMAS, 2015; Finger et al., 2016; 황기돈, 2017)
- 공유경제는 자원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진 반면, 그 이면에는 인간관계 상품화, 단기 일자리 증가, 노동자 보호와 규제 문제 제기로 정부의 효과적 대응책 필요

※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금속노조인 IG Metall 중심으로 창설된 'Fair Crowd Work'

< IG Metall의 'Fair Crowd Work' 홈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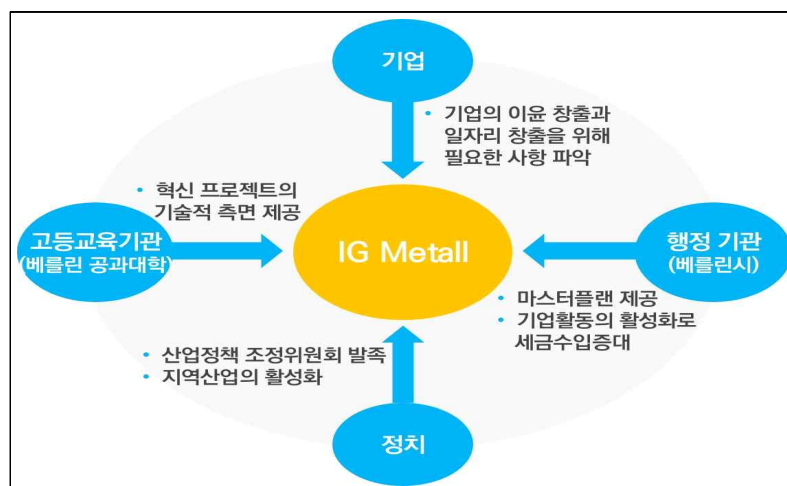


자료: <http://faircrowd.work/>

□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베를린의 혁신 네트워크(Innovationsnetzwerk) 프로젝트¹⁾

- 2000년대 초 베를린시는 기업의 고용 축소와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경험
 - 2005년 베를린의 주요 산업분야인 기계 및 전자산업 일자리가 동베를린은 12만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서베를린은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축소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협업의 필요성 주목
- 독일 최대 노동조합인 IG Metall은 지역경제의 부흥을 위해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베를린시가 가진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시설과 연구기관을 활용한 도시 산업의 발전을 도모
 - 기업들은 기밀엄수를 이유로 지자체와 정당과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반대하였으나 노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보다 많은 산업 현장 정보를 가진 IG Metall이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주도
 - ※ 2006년부터 추진한 혁신네트워크 프로젝트에는 금속과 전자산업 분야의 6개 기업이 참여하고 공공기관이 협조하였으며, 재원 중 1/3은 기업이, 나머지 2/3은 국가가 조달
 - 참여 기업, IG Metall, 공공기관, 교육기관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기업은 이윤 증진을 달성

< IG Metall의 혁신 네트워크 >



1) 이 내용은 IG Metall(2014)의 내용에서 Berlin 사례를 요약, 정리함.

나 플랫폼기반의 협력 -지역 네트워크-

□ 라이프지히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²⁾

- 통일 이후 독일은 구동독지역의 산업재건을 위해 과세한 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³⁾를 산업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구동독 산업의 부흥과 지역산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지만 성과는 미미함
 - 구동독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으로 지역 네트워크가 취약
- 구동독 지역 중 작센(Sachsen)주의 드레스덴(Dresden)시는 행정도시, 켐니츠 (Chemnitz)는 산업도시, 라이프지히(Leipzig)시는 무역과 서비스 도시로 특화
 - 통일 전 10만 명이었던 라이프지히시의 제조업 일자리가 1990년대 1만4천 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IG Metall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라이프지히시의 산업재건을 추진
- 라이프지히시는 주물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자동차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동독지역의 자동차산업 네트워크이자 유럽의 고부가가치 산업센터로 발전
 - 기계건설, 전자공학, 통신 등 분야에서 서독 대기업들의 자회사 설립과 중소기업 수 증가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guten Arbeit)’와 ‘싼 상품 대신 질 좋은 상품(besser statt billiger)’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업 혁신을 강조하는 임금과 기업정책을 추진
 - 근로시간 유연화와 생산방법과 근로시스템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 하였고, 이 과정에서 IG Metall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IG Metall은 라이프지히시에 있는 기업 지멘스(Siemens)가 구조 조정 프로그램 ‘Siemens 2014’ 추진을 통해 전기개폐장치 시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계획을 저지하는데 기여
 - 당시 라이프지히의 450명의 근로자, 약 50명의 차용노동자, 관련 공급, 서비스 부문의 약 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협에 처함

2) 이 내용은 IG Metall(2014)의 내용에서 Leipzig 사례를 요약, 정리함.

3) 아래 참고사항 참조.

- 상세 자료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해당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 도출
- IG Metall은 지멘스가 해당 내용을 공시하기 전에 지멘스의 매니저들과 관련 자료를 점검하고, 지역 정치인, 언론 매체, 교회 등과 접촉하여 지멘스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
- 2012년 라이프지히시에서 해안가 풍력기 부품 제조기업인 SIAG Tube & Tower GmbH(STT)가 파산을 신청하였지만, IG Metall은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SIAG그룹의 기업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도출
 - 당시 SIAG 그룹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자회사인 STT에 대한 파산절차를 결정하였으나
 - IG Metall은 투자확대, SIAG 조직개편, 소비자 신뢰 확보, 그리고 중기적으로 '서비스와 혁신센터' 건설을 통한 영업분야 개척의 중요성을 설득시켜 STT의 파산 결정을 막아내었으며, STT는 2013년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

< 참고: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

- ▷ (도입배경) 연대세는 통일이후 동·서독간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마련의 재정적 수단으로 1991년에 설치된 조세임
- 연대세는 연방세⁴⁾로서 매해 약 160억 유로의 연대세가 징수되어 연방정부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음
 - 2014년: 15,049백만 유로 → 2015년: 15,930 백만 유로 → 2016년 16,855 백만 유로 (독일연방통계국)
- ▷ (과세체계) 소득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2018년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의 5.5%임
- 1991년 연대세는 7.5%세율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1년만인 1992년 폐지되었고, 이후 1995년에 7.5%의 세율로 다시 도입되었으며 1998년 5.5%로 세율을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 유지
 - 예를 들어 매달 180유로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9.9유로(180유로×5.5%)의 연대세를 납부해야 함

▷ 징수 방법과 비과세 원칙

- **(징수방법)** 연대세는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수(tax withholding) 하도록 되어있음
- **(비과세)** 매달 근로소득이 972유로 미만인 미혼 근로소득자는 연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944유로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됨
 - 근로소득이 972(1,944)유로 이상, 1,340(2,680)유로 미만인 미혼(부부합산) 근로소득자의 연대세 세율은 0%부터 5.5% 사이의 적정 세율로 과세

▷ 주요 쟁점사항

- **(쟁점사항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대세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대세가 도입될 1991년 당시에는 걸프전쟁 비용(170억DM) 총당과 동부유럽 및 남부유럽 지원을 위한 재원 총당이 주요 목적
 -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실제 통일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연대세는 독일 통일 이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
 -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대세는 구동독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었으나 연대세는 목적세가 아니므로 다른 용도의 지출로도 사용 가능
- **(쟁점사항 2)** 연대세는 독일내에서 헌법상의 평등원칙(헌법 제3조), 즉 조세형평성원칙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진행 중
 - 하지만 연대세의 경우 독일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거주자)와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비거주자)의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이 서로 달라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남
 -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독일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대세 납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큼

4) 독일은 16개의 주(Bundesland)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공동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연방의 세수가 되는 연방세로서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담배세(Tabaksteuer), 커피세(Kaffeesteuer), 증류주세(Branntweinsteuer), 보험세(Versicherungsteuer), 알코올세(Alcopopsteuer), 샴페인세(Schaumweinsteuer), 전기세(Stromsteuer), 자동차세(Kraftfahrzeugsteuer), 에너지세(Energiesteuer), 항공세(Luftverkehrsteuer), 원자력세(Kernbrennstoffsteuer) 등이 있음.

5) 동일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서로 다른 개인에게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가 공유경제 시범도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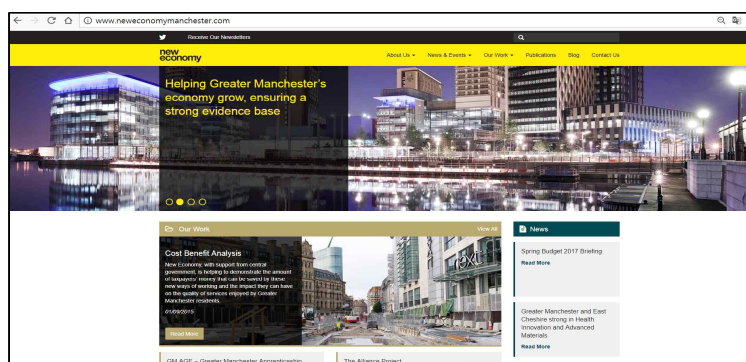
□ 영국은 맨체스터(Manchester)시와 리즈(Leeds)시를 공유경제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

- 영국정부는 맨체스터시를 의료서비스의 공유경제도시로 지정(2015년)하고 공공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리즈시는 지역협력 기반의 수송서비스(2016년)의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도모

□ 맨체스터시는 정보망구축과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분야 활성화를 추구

- 맨체스터시는 10개 도시로 구성된 'Greater Manchester' 지역의 280만 명 중 약 5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The Greater Manchester Population Health Plan(2017-2021)'을 추진
 - ※ Greater Manchester 지역은 영국에 생물의학 분야의 연구가 발달한 지역으로, 생물공학, 의약품, 건강관리 분야에 200개가 넘는 회사가 위치
 - 인구 고령화, 의료서비스의 외주화(outsourcing)와 민간병원의 증가,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증가가 추진 배경
 - 영국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 지원

< 맨체스터시의 new economy 홈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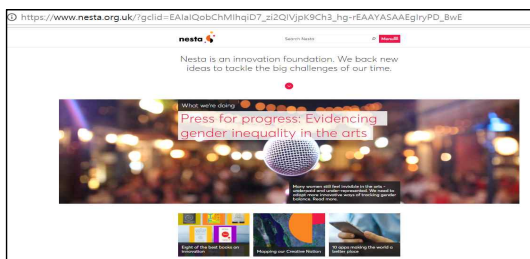
자료: <http://www.neweconomymanchester.com/>

- 영국정부는 통계청(Innovation Lab and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과 협력하여 공유경제에 필요한 지역 수요와 기술적인 상황에 대한 통계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적 의사 결정 추진
 - 통계청이 가진 맨체스터 지역에 대한 의료정보(의료서비스, 의료분야 고용률, 장애인 수, 사망원인, 질병 추세 등)의 구축과 제공으로 지역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 리즈시는 지역 민간업체와 협업에 기초한 수송서비스 확대로 공유경제 추진

- 리즈시는 영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10만 개의 사업체가 위치한 인구 약 300만 명 규모의 경제도시
 - 하지만 중앙정부의 투자 감소로 타 지역으로의 수송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수송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공유경제의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승객들이 지역교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도
 - 지자체 소유의 차량을 카풀 회원제 차량으로 대체하고 카풀 참여 차량에 대해 기차역과 도심지역에 주차공간을 제공
 - 리즈시 지역과 웨스트 요크셔 도시연합 정부는 지자체인 커크리스(Kirklees)와 협력하여 지역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 장비, 트럭 등에 대해 거주민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 영국 정부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큐베이터와 연구 센터를 개소하며 민간투자를 장려하며, Nesta와 Innovative UK와 협업

< Nesta(왼쪽)와 Innovative UK(오른쪽) 웹사이트 첫 화면 >



나 민관협력 기반 공유경제

□ 잉글랜드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에어비앤비형 병실 'CareRooms' 와 협업하여 공유경제형 병실 도입을 지원

- 영국은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병실과 장기입원(bedblocking)은 고질적 문제점
 - 2017년 NHS 병원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입원 수가 3년만에 52% 증가했으며, 매년 약 8,000명이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실 부족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 스타트업 CareRooms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병실문제를 비용절약적으로 해결하며 환자, 가족, 병원, 호스트(host) 모두가 상호간 유익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스타트업 CareRooms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호스트들의 자택에 있는 빈 방을 병실로 사용하며 호스트의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 제시
 - 호스트는 인터뷰, 신원조회와 식품 위생 관련 검사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호스트가 제공하는 빈 방은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 검사를 받게 되며, NHS는 필요시 병실에 의료기기 등을 지원
 - 현재 CareRooms는 NHS England와 사우스엔드(Southend) 지역 당국과 협업하여 에섹스(Essex)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NHS는 시범 서비스를 위해 빈 방 대여 비용으로 최대 1,000파운드 지원

4 중국

< 중국 공유경제 및 지역의료 >

- ▷ 2016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34,520억 위안 규모로 전년대비 103% 성장
 -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수는 60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년 대비 10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공유경제 플랫폼 등에 취업한 인구수도 58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증가한 규모
- ▷ 중국내 공유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이르며, 중국 정부도 2025년까지 공유경제 부가가치 규모를 GDP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國家信息中心分享經濟研究中心a, 2017)
- ▷ 중국 정부가 공유경제 부문 성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공유경제가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서비스업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 중국 경제의 체제전환(Transition),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또는 농업중심의 전통경제에서 서비스 중심의 고도화된 경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
 - 공유경제 발전은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며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 비해 취업탄력성 현저히 높음
- ▷ 중국은 계획경제시기 검직 의료인력 양성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오지까지 커버하는 국가차원의 의료보건네트워크를 구축했으나
 -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네트워크가 와해되어, 기초의료보건기관(底層醫療衛生機構)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로 도시지역 편중
- ▷ 환자 의료비 개인부담이 많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중국 공립병원(公立醫院)의 경우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웃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병원 수익에서 약품 판매를 통한 이윤이 큰 비중을 차지(以藥養醫)하고 있어 개인 부담 가중
- ▷ 중국 정부는 기초의료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공립병원의 의료 수요 공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의료보험 수지를 흑자로 돌려놓아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陳曉榮, 2016)

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

□ 새로 생성되는 지방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유경제 활용

- 교통, 숙박, 생활서비스, 의료,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들이 창업하고 활성화되면서 새로 성장하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공유숙소 예약 서비스 투지아(途家)는 개인간거래(P2P) 외에도 다주택 보유자와의 연계를 통해, 공실율이 80%에 달하던 산야(三亞)지역 부동산투자 미스매치 완화 역할수행(나승권, 김은미, 최은혜, 2017)

□ 지역의료기관 수급 부족이라는 지역 문제 해결에 공유경제 활용

- 중국 정부는 중국 의료체제의 문제, 즉 지방 정부의 재정고갈 문제, 공립 병원의 수급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산밍시(三明市)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실험을 진행(童凌娟, 2016)

< 지엔캉 산밍 의료 플랫폼 홈페이지 >



- 산밍시의 지역 의료보험 지출이 줄어들어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으며 의료인원들의 수입도 증가하는 등 효율성 개선(領導決策新息, 2016)

< 산밍시 의료보험 수입지출 수지 >

(단위: 억 위안)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산밍시 의료보험 수입지출수지	-1.43	-2.08	0.22	0.75	1.3

자료: 領導決策新息(2016)

- 의료 공급 측과 의료 수요 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중국 정부는 산밍시 모델을 상하이, 청두, 선전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중

나 의료 지식 공유 플랫폼

□ 온라인에서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발전

- 중국 정부는 원격의료나 온라인 의료 서비스 플랫폼 발전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구축(陳曉榮, 2016)
 - 처음부터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先관망 後조치)**을 채택
- 2011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대대적인 의료인원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웨이보(微博)가 발전하던 시기와 맞물려 의대생들부터 **온라인으로 의료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
- 국가위생계획위원회(國家衛生計劃委員會)에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推進醫療機構遠程醫療服務的意見)을 통해 의사-의사간은 물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
 - 이에 공유경제 서비스가 발전할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만성 질병에 대한 원격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온라인 가정 주치의(家庭醫生)를 법적으로 허용** 지원
- 2006년부터 하오다이푸(好大夫) 플랫폼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시작되었고 2010년부터 과하오왕(挂号网)에서 진료예약 서비스 시작
 - 덩샹위엔(丁香園)은 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건강컨설팅을 하고 제약 기업으로부터 홍보비를 받는 등 의료 공유 플랫폼
- 춘위이성(春雨醫生)은 웨이보를 통한 온라인 의료지식을 공유
 - 지엔캉산밍은 산밍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구축된 플랫폼으로 의료보험기록, 건강기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의 계획경제시대 국가가 전담하던 의료체제가 붕괴한 후, 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력과 시설 또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비쌌
 - 과하오왕(挂号网)을 비롯한 의료 지식 공유 서비스 플랫폼 활용으로 **지역 문제를 완화(國家信息中心分享經濟研究中心b, 2017)**

< 중국 대표 온라인 공유 의료 서비스 플랫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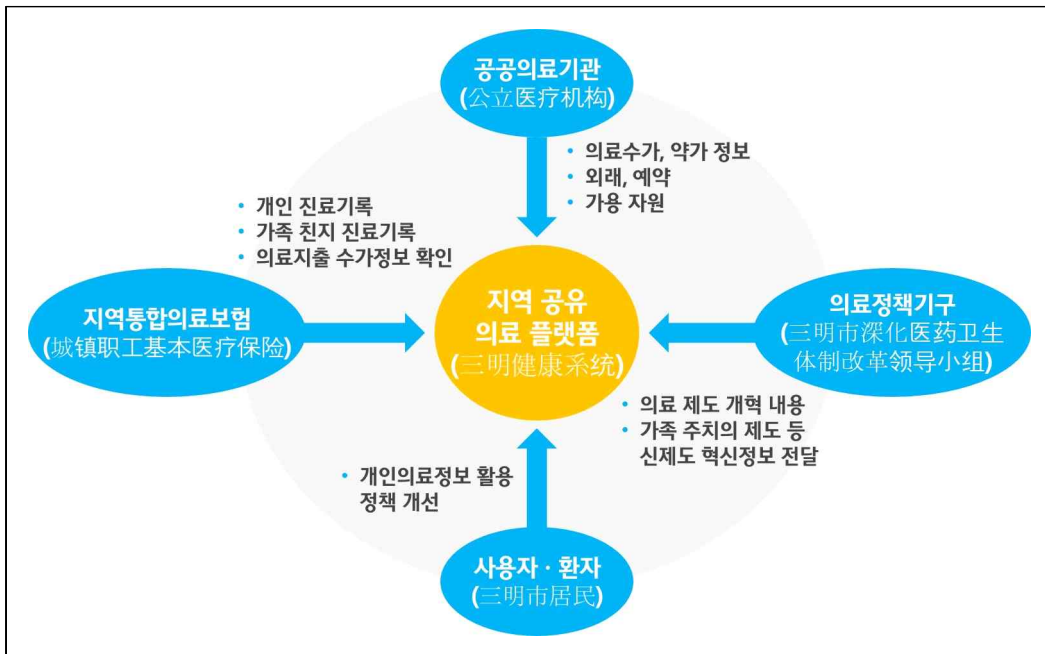
공유 의료 플랫폼		서비스 내용	연혁 및 사업관련 특이사항
과하오왕 (微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진료 및 의료정보 제공 • 공립병원 접수 예약 도우미 서비스 • 의사 및 진료 기관에 대한 평점, 리뷰 정보 제공 • 진단 결과 모바일 전송 • www.guahao.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결제, 예약 가능 • 2010년 전신이 되는 서비스 출시 • 2014년 10월 텐센트사로부터 1억 달러 투자유치 • 2016년 10월 기준 29개성, 2400개 중점 의료기관, 1.5억 등록인
춘위이성 (春雨医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 통한 의료자문 서비스 • 환자-의료기관 연결 • 의료정보 데이터 베이스 운영 • www.chunyuyisheng.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기층의료인원 부족으로 정책적으로 의료인원 대량양성이 시작 • 온라인 블로그인 웨이보(微博)가 유행하며 의사들이 온라인 의료 지식 제공 시작
딩상위엔 (丁香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부문 종사자 커뮤니티 • 구인구직, 회의, 교육, 연구, 조사 관련 정보 제공 • 인터넷 의료진료 서비스 운영 • www.dxy.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가 존재했으며 2006년부터 기업화되어 운영되기 시작 • 2011년 덩상위엔 용약지도 앱이 출시되어 서비스됨
지엔캉산밍 (健康三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건강기록 제공 • 의료보험기록 및 부양가족 의료 기록 열람 • 가정의원 서비스 • 헬스케어 컨설팅 • 의료개혁 정책홍보 • 약값 및 지역 병원 경영 조회 • www.jksmpt.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산밍시 의료제도 개혁이 시작되면서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들의 통합 버전 • 산밍시 의료제도개혁 영도소조 판공실(三明市深化医药改革领导小组办公室) 홈페이지와 산밍시 공중보건정보관리플랫폼(三明市公众健康信息管理平台)과 의료보험기록 정보제공 플랫폼의 통합을 통해 이뤄짐

자료: 陈晓荣(2016) 내용과 각 플랫폼 홈페이지 내용 바탕 저자 정리

□ 의료 지식을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공유하여 다양한 효과 발생

- 공유 의료 플랫폼은 오프라인 검진 시설을 운영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상담 정보 혹은 건강검진 정보를 보험회사와 공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환자들의 부담 경감
 -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맞춤치료 가능성 증가, 기술 발달로 인한 스마트 헬스 케어 가능성이 증대
- 공유경제 플랫폼서비스에 연계한 오프라인 진단기관이 늘고 병원예약 수속, 원격진료, 만성질환관리, 건강컨설팅,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보험 기업들과 공동투자하며 활발한 서비스 중
- 의료지식 공유 플랫폼들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 의사와 병원은 의료자문을 제공하는 대신 홍보효과를 누리고 환자들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병의 중증도 진단(分級診斷) 등을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미리 함으로써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의료보험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소규모 병원들의 수익증대에 기여 효과

< 중국 의료 공유 플랫폼 >



다 의료 자원 공유 플랫폼

□ 개인의사간 의료 시설을 공유하는 항저우시의 의료자원 공유 플랫폼

- 항저우 시는 2017년 시보건계획위원회 국제의료물시범단위설치관한(안) (關於設置全程國際Medical Mall試點的請示) 승인을 얻어 프로젝트 추진
 - 신지에마이그룹(新解百集團)와 디안진단(迪安診斷), 마이다그룹(百大集團)의 자본으로 22층의 메디컬 몰(Medical Mall: 全程國際健康醫療中心)이 지어져서 9층부터 22층까지 의료시설을 공유하는데 **공유 의료 플랫폼에 소속된 의사는 이 시설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의사는 따로 자기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따로 합의하에 개인 병원에 갖추지 못했지만 메디컬 몰에 비치된 시설을 활용해서 시술 함으로써 고정비용을 줄이고 높은 수익을 얻음

< 항저우 시 全程國際 메디컬 몰 >



자료: 잉상뉴스(<http://news.winshang.com/html/062/0462.html>)

□ 지역택시업계와 연계한 후송 서비스까지 있는 광둥성 의료자원 공유 플랫폼

- 광둥성에서는 2017년부터 텐센트가 주도하여 의사협회, 홍산(紅杉資本) 벤처캐피탈 등이 같이 참여한 펑귄병원(企鵝醫院) **공유의료 플랫폼** 운영
 - 1단계 진료시는 개인 의사들 각자 병원을 활용하고, 2단계 진료시는 개인 의사들간의 연합을 통해 운영하며, 비싼 진단장비와 의료시술 장비가 필요한 3단계 진료시는 공유의료플랫폼을 개인의사들이 공유하는 시스템

< 펑궈병원(企鵝医院) >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578869101487936351&wfr=spider&for=pc>

- 광저우에서는 2017년 500여명의 의사집단 중심으로 다이웨이(大医匯) 공유 의료 플랫폼이 성립했으며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 야간진료(大医匯夜市)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택시 협회와 연계한 환자 긴급후송까지 서비스 중
- 항저우와 선전의 의료 자원 공유 시스템은 개인 의료 인력의 창업비용을 낮춰서 의료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중복투자를 방지해서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함

< 의료 공유 플랫폼 실패 사례 >

- ▷ 바이두의 실패 사례: 2016년 4월 희귀암을 앓던 웨이쩌시(魏則西)는 바이두 의료 공유 플랫폼 바이두의사(百度医生)가 추천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오진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으며 이로 인해 바이두 의료사업부가 폐지
 - 2015년 바이두의사 플랫폼을 통한 병원 예약은 중국 시장점유율 10%, 예약 수는 매일 5만 건에 달했으나
 - 이 사건 이후, 공유플랫폼 활용하는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했으며 의료사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중단
- ▷ 의료 분야 공유경제의 특수성 고려한 생태계 구축 유도 필요
 - 의료분야 공유경제 플랫폼 활용은 의료 공급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업논리와 수익성이 주된 목적이 되면 위험한 결과 초래가능

Ⅲ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활용(안)

1 공유 플랫폼 표준 개발·배포·연계

- **구성원들 간의 자원 공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개발과 배포**
 - 개인,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물건, 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유희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표준적인 플랫폼 구축과 배포** 필요
 - 미국의 경우 MyTurn.com은 공구 도서관 플랫폼 솔루션인 'Local Tools'를 제작하여 미국 내 80여개 공동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공급 중

- **공유 플랫폼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도입 필요**
 - 공유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유희 자원의 관리 및 공유뿐만 아니라 **지역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수리 카페(Repair Cafe)'의 경우, 수리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고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협업을 통해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간 공유 플랫폼의 연계성 강화**
 - 산업화 이후 세계 경제에서 도시 경제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도시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상당한 가운데 도시는 세계 자원의 75%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60~80%를 차지(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전반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모델** 고려
 - 기존 '채취-제조-폐기(take-make-dispose)'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모델이 환경 및 지속가능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순환경제 모델 관심 증대
 - ※ 순환경제 모델: 공유경제 기반의 유희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제품 수명 연장,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 모델

- Inter/Intra-city 차원의 자원 순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과 도시 간 공유 서비스 연계 추진 필요
 - 개별 도시 보유의 공공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공유 플랫폼 간의 서비스 연계 추진
 - 예를 들어, 서울시, 수원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을 연계하여 도시 간 유휴 자원 순환 및 활용 제고
 - 덴마크는 건축 및 부동산 분야의 자원 절약, 건축 폐기물 감소, 건축 구성물의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유럽 최초로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듈 방식 건축물을 제작

< 도시간 순환경제 시범사업 >

- ▷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Circular City Network를 구성하여 뉴욕, 런던, 토론토 등 12개 도시간 연계하여 순환경제 시범 적용
 - 전세계 지도자들은 장기적 번영과 자원의 충족, 경제의 자립성, 각국 도심지의 복지를 보장하는 한편 현재의 도시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재고하고, 새로운 가치와 최적화 방법을 창출해내야 함
 -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도시의 자원, 수용능력, 삶의 질에 큰 압박 요소이나 한편으로 도시의 순환경제 어젠다에 큰 추진력을 갖게 하며, 전환 시 도시가 엄청난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와의 접목 방안 마련 필요
- ▷ 순환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에서는 이러한 임무 지원을 위해 2가지 목표에 대해 심층연구 진행 중
 - ① 순환경제가 도시에 가져올 기회
 - ②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실행 가능한 도시의 기회 포착 방안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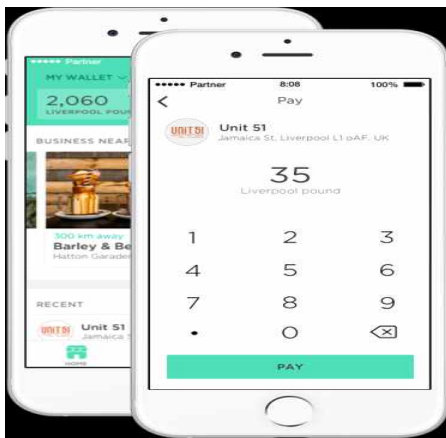
2

디지털 공동체 화폐(지역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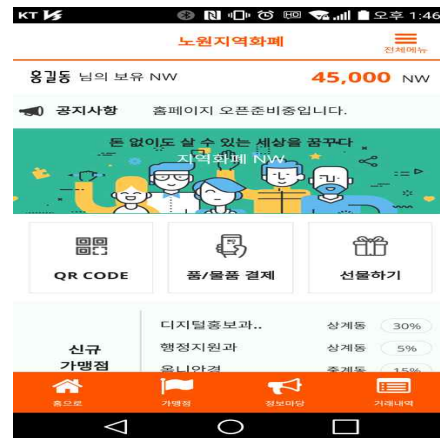
□ 디지털 기반의 공동체 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검토 필요

- 이타카아워, 브리스톨 파운드 등과 같은 지폐 형태의 실물화폐의 경우 조폐 비용, 위변조 위험 등의 문제점 내재
- 실물화폐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공동체 화폐 등장
 - 2017년 영국 리버풀에서는 이스라엘 소재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주도로 가상화폐 기반의 '리버풀 파운드(Liverpool Pound)' 도입
 - 사용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로 최초 가입 시 £5, 스마트폰 충전 금액에 10% 추가 지급하는 한편 비즈니스 가입자에게는 결제 건별 수수료 없이 월 £20의 가입비만 청구
 - 국내에서도 2018년 1월 서울시 노원구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역화폐 '노원(NW)' 도입

< 리버풀 파운드 스마트폰 앱 >



< 노원 스마트폰 앱 >



-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디지털 기반 공동체 화폐 확산에 일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관련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사례 검토 필요

3 공유서비스 개발·활용시 지역공동체 협력

- **공유경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 필요**
 - 최근 플랫폼 경제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에서 기술변화와 함께 공유경제와 지역경제와의 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정책 도입 방안이 유럽에서 검토되고 있음(Schmid-Druner, 2016; Schimidt, 2017)

- **독일의 경우,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법률적 분쟁이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에 대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
 - 협동조합인 IG Metall은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자가 처한 비대칭정보를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독일정부는 지역 사회와의 플랫폼 구축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
 - 특히 서비스와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영국의 경우, 공공부분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민간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경제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맨체스터시는 고령화, 의료산업의 외주화, 예산 삭감 등의 도전에 대응해 공유경제를 통해 효율성 증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정도를 낮추기 위해 의료분야 공유경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특히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통계청과의 협조하여 의료서비스와 지역부분의 수요에 대해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
 - 리즈시는 민간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강점인 수송 연결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함

-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제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공공 공유 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 보건 의료 재정 집행 효율화 추진**
 - 구축된 지역 주민들의 진료 기록과 가족력 등 보건의료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하고 상업적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의료 플랫폼 개발**
 - 질병관리본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적극적 연계 활용이 어려운 상황
 - PC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실용적인 모바일 플랫폼 개발도 접근중
 - 오프라인 이동 진료센터, 응급의료 운송 치료 시설 등을 공공 예산으로 확충하되, 지역 의료 인력이 이를 적극 공유해서 활용하는 방안 추진 필요
 - 중국 항저우, 선전의 개혁을 벤치마킹해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연계 검토 필요
 - 119 응급구조 조직과 연계하고 고령화 인구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도모 등
 - **중국 의료현실과 국내 상황은 상이한 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효과가 큰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원해야 함**
 - 의사-환자 원격의료와 의료자원 공유 등 급진적인 모색보다는 개인 의료정보와 의료기관 정보공유와 같이 점진적이고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플랫폼을 우선 발전시키도록 정책 유도

IV 결론 및 시사점

- **기존 소비 중심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경제 전반 및 공공 부문에서의 공유경제 모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공유경제 모델은 역내 일자리 창출, 로컬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있어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공공부문의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내 자원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표준을 개발하여 배포 하는 한편 여타 지역과의 연계 추진**
 - 다양한 유희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공유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 배포하는 한편 지역내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병행
 - 도시 간 순환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별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하려는 노력도 필요
-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동체 화폐 관련 기술 개발 및 사례 검토 필요**
 -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증대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체 화폐 도입과 관련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역경제발전과 공유경제 활용은 국가의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국가산업의 발전방향의 큰 틀에서 공유경제가 활용되어야 함**
 -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 시키는데 공유경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역경제의 노동시장의 경직화, 산업의 미발달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
-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장점 이외에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공유경제의 성공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

- 공유경제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중앙정부의 리더십보다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사업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데 공유경제가 기여할 수 있음

□ 중국 공유 의료 플랫폼 성공은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노력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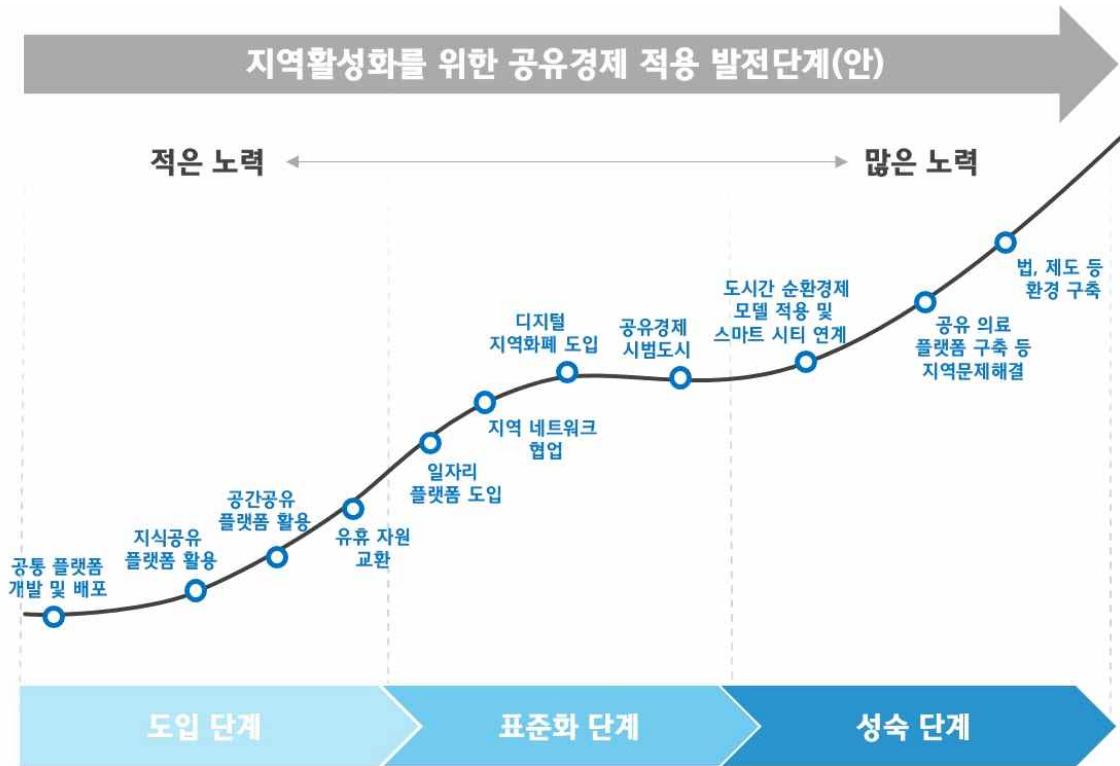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공유 경제에 대해 처음부터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규제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先관망 後조치)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의료 발전도 역동적으로 달성
- 규제공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는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를 조성하고 도약적 기술추격(leapfrog)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며 성공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의료 분야 공유경제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현실적인 지방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성과 달성 가능

- 의료분야 공유경제 플랫폼 활용은 의료 공급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업논리와 수익성이 주된 목적이 될 경우 기 언급된 실패 사례처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의료공유 플랫폼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해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적용 발전단계(안)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공유경제를 도입할 시 아래와 같은 발전단계 모델을 참고할 것을 제안함



※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발전단계(안)이며, 위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공유경제를 성공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 위의 3단계는 PwC의 보고서 ‘Sharing economy life-cycle’의 5단계를 재구성

- **(도입 단계)** 비교적 적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단계로, 공유경제 공통 플랫폼을 개발·배포하여 지역내 공유경제 도입 및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
- **(표준화 단계)** 공유경제 적용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공통 플랫폼으로 촉발된 활발한 공유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일자리 플랫폼 및 디지털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등 공유경제 시범도시 추진
- **(성숙 단계)**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된 공유경제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가 더욱 노력해야하는 단계로, 공유경제 시범도시에 도시간 순환경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는 한편 법·제도 마련 등 환경 구축

[참고자료]

- Aigner, I., Blöcker, A., Dispan, J., Duin, G., Dulig, M., Geiken, M., Giesler, K., Höbel, O.A., Hoffmeister-Kraut, N., Köhlinger, J. and Lies, O. (2017), *Industriepolitik in den Bundesländern: Perspektiven, Maßnahmen, Ziele*. Campus Verlag.
- Botsman, R. (2013). *The Sharing Economy Lacks A Shared Definition*. Retrieved from <https://www.fastcompany.com/3022028/the-sharing-economy-lacks-a-shared-definition>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2015), *Grünbuch Arbeiten 4.0*, Berlin.
- Circular cities,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programmes/government/circular-cities>
- 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Cities in the Circular Economy: An Initial Explo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publications/cities-in-the-circular-economy-an-initial-exploration>
- Fang, B., Ye, Q., and Law, R. (2016), "Effect of sharing economy on tourism
- Finger, M., Bert, N., Kupfer, D., Montero, J.J. and WOLEK, M. (2016), *Research for TRAN committee: infrastructure funding challenges in the sharing economy*, Study of the European Parliament, <http://hdl.handle.net/1814/46429>
- Friedrich Ebert Stiftung (2008), *Industriepolitik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Lehren der Vergangenheit, Herausforderungen für die Zukunft*, Berlin 2008.
- Geppert, K., Gornig, M. and Drescher-Bonny, I. (2009), *Neue Wachstumschancen für Berlin*, Regioverlag.
- IG Metall (2014), *Industriepolitik heute: Regionale Beispiele für Industriepolitik*, https://www.igmetall.de/Broschuere_IndustrieEnergie__c6855693ae0db0020b0fa87e9e1ace27c94eeb55.pdf.
- Lessig, L.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 Li, Z., Hong, Y., and Zhang, Z. (2016). "An Empirical Analysis of On-demand Ride Sharing and Traffic Congestion", *Thirty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ublin, Ireland*.
- One earth(2015).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 Mrass, V., & Peters, C. (2018). *Digitale Wertschöpfung durch Crowd Services: Neue Formen des Kundensupports am Beispiel Mila und Swisscom*, In: *Multikonferenz Wirtschaftsinformatik (MKWI)*, Lüneburg, Germany.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ssachusetts, U.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PwC. (2015). *The Sharing Economy*. Retrieved from <https://www.pwc.com/us/en/industry/entertainment-media/publications/consumer-intelligence-series/assets/pwc-cis-sharing-economy.pdf>

- Schmidt, F. (2017). Digital Labour Markets in the Platform Economy, Mapping the Political Challenges of Crowd Work and Gig Work, Friedrich Ebert Stiftung.
- Schmid-Druner, M. (2016). The Situation of Workers in the Collaborative Economy, European Parliament.
- Scholz, T., & Schneider, N. (2016). *Ours to hack and to own: The rise of platform cooperativism, a new vision for the future of work and a fairer Internet*. OR books.
- Sundararajan, A. (2016).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U.S.: MIT Press.
- Vize, R. (2016). The Greater Manchester experiment, BMJ: British Medical Journal (Online), 352.
- Wallis, S. (2005). Keep it in the community.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05/mar/30/guardiansocietysupplement5>
- World Economic Forum. (2015).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Retrieved from http://www3.weforum.org/docs/WEF_GAC15_Technological_Tipping_Points_report_2015.pdf
- Woskow D, (2014). “Unlocking the sharing economy: an independent review”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London.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78291/bis-14-1227-unlocking-the-sharingeconomy-an-independent-review.pdf.
- 강규호(2006),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경제분석 제12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고상원(2000), 「신경제(New Economy)의 특징과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 Vol.10, No.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광주시(2015), 공유문화도시 광주 추진계획.
- 경기연구원(201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국토연구원(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 (2017),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KIEP 연구자료 17-10
- 부산시(2015), 공유경제 부산 추진계획.
- 서울시(2015), 공유 서울 2기 추진계획.
- 이수일(2015).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Retrieved from KDI: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06252&research_id=1051000-201700042
- 지방자치실천포럼(2017).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新지역발전방안
- 전북연구원(2016). 나뉘쓰는 공유경제, 도민의식과 지역사회 대응방향
- 천용찬(2017). 중국 공유경제 현황 분석, KIEP CSF 이슈분석, 2017-94

한지민(2016). 「13.5 계획」기간 중국의 공행(共享)발전 전략 방향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한국행정연구원(2017).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방분권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공유경제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추진전략 D.gov 기획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7 ICT기반 국가미래전략 Big Step 보고서

황기돈(2017) 독일의 노동 4.0 백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에 대한 청사진, 경상논총, 35(4), pp. 85-105.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a, 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 2017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b, 中国医疗分享发展报告 2017

領導決策新息, 「福建三明醫改獲中央深改組肯定」, 『領導決策新息』, 2016年3月號

童凌娟. 「关于三明医改, 这份报告“讲到骨子里去了”!」, 三明电视台 2016年11月29日
<http://www.smnet.com.cn/p/11235.html>

陈晓荣. 「互联网医疗是看病难的终极解决方案」 2016
<http://mp.ofweek.com/medical/a945653021986>

李俊明, 「百度医疗为何失败? 唯KPI, 用新人, 领导不懂医药行业」 虎嗅网 2017
<https://www.huxiu.com/article/180595.html>

國務院, 「健康中国2030规划纲要」 2016년 10월 25일
http://www.gov.cn/xinwen/2016-10/25/content_5124174.htm

发展和改革委员会 等, 「关于促进分享经济发展的指导性意见」 2017년 1245호 문건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692736/content.html>

國務院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和规范健康医疗大数据应用发展的指导意见」 2016년 47호 문건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6/24/content_5085091.htm

三明市, 「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领导小组关于印发加快推进家庭医生签约服务工作实施方案的通知」
 2017년 6월 30일
http://www.sm.gov.cn/zw/ztl/shyywstzgg/zcwj/201707/t20170704_730498.htm

건강삼명(健康三明系统) 홈페이지 버전 3.0
<http://www.jksm.gov.cn/portal/home/index.html?isLogin=error>

▶ 작 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정책기획팀
신 선 영 수석연구원 (053-230-1205, shinsy@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정책기획팀
김 영 화 선임연구원 (053-230-1219, lindsey@nia.or.kr)

▶ 자 문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오 세 환 교수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장 태 석 교수
-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노 성 호 교수

▶ 기 획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박 정 은 본부장, 오 성 탁 팀장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ICT진흥 및 혁신기반조성(정보화, R&D)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